

국비 지원 확대없이 올림픽 준비 '불가'

내년부터 심각해지는 도의 재정 압박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권 반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20일께 공포될 동계 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 확대,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상향 등이 과제다.

도의 올해 예산은 3조7,358억원이지만 사용처가 정해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는 3조2,937억원이다. 이중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 등 필수적인 사업비를 제외하고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500억원으로 여기에도 필수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 결국 도의 기용예산 대부분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들어야 할 실정이다. 또 도의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중 도비

부담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22%(2,014억원)로 늘어나는 등 복지예산은 해마다 수백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예산 증가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비용과 함께 앞으로 6년간 도 재정을 압박할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도비 대거 투입이 타 분야 사

도 재정압박 성공 개최 가능성 의구심

타 시·군 지원금 위축 불만 반발 우려

2014 소치 대회직접시설 100% 지원

업은 물론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금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개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불만과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또 개최지인 강릉시와 평창군도 지방비 중 일부를 도와 나눠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심각한 재정압박이 예상된다. 도의 재정 자립도는 27.5%, 강릉시는 23.

1%, 평창군은 15.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도와 강릉 평창의 재정 상태로는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대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기장에는 총 5,404억원, 진입도로에는 총 3,748억원이 들어가며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각각 25%, 30%다. 여기에 환경 및 경관 정비, 선수훈련시설,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설치, 식수전용 저수지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감안하면 도와 해당 시·군의 재정력으로는 대회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 달리 산악지형에서 열린다는 면에서 민간자본 유치도 어렵다. 이 같은 특성에 따라 2006토리노와 2014소치의 대회직접시설은 100% 국비로 건설됐다. 또 1994 릴레함메르도 90%의 국비가 지원됐다. 이규호기자 hokuy1@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주)삼흥 우수상 수상



도내 중견건설업체인 춘천의 (주)삼흥(대표:서현길·사진)이 올해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중견기업 우수상'을 수상한다.

1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건설업체를 발굴해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윤리경영대상 중 (주)삼흥이 중견기업 우수상에 뽑혔다. (주)삼흥은 △CEO의 윤리경영 의지 및 기업윤리시스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책임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20일 오전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위윤기자

올림픽 시설 공사 '남의 잔치' 전략 위기

동계특별법 시행령 다음주 공포 ... 지역업체 우대 방안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해 최근 도내 공사 발주량 급감 업계 경영난 악화 ... 실질적 참여 확대 대책 절실

도내 건설업계의 최대 숙원사업인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이 지역업체 우대방안의 구체적 명시가 물거품되면서 관련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다음 주 중 공포되는 동계올림픽 시행령에는 지역업체 우대와 관련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포함됐을 뿐이다. 이 규정은 사실상 올림픽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지분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도와 도내 건설단체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분할발주, 지역물품 구매 및 고용 우선 등의 우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의 모호한 기준으로 지역업체 참여의 폭이 크게 제한돼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공사는 대부분 외지 업체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할 것으로 보여 남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최근 공사 발주량이 크게 줄어들어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인 동계올림픽마저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되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내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주된 일반

건설 총 공사금액은 5,882억4,112만원으로 2009년 9,041억3,846만원의 65.1% 수준으로 3분의 2에 불과하다.

도내 전본건설 및 설비건설업체의 발

주금액과 수주량도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령 공포 후에도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관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정동기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공사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 내 중·대형공사에는 도내업체의 참여폭이 제한돼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건설업계의 희망인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 우대 방안이 실현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